

# 재난지원금, 다음달 15일 이전 지급 전망

### 추경안 12조 2000억 합의 기준보다 4조 6000억 늘어 기부금 모집 특별법 의결 n번방 재발방지법도 처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 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섭단체 4당 간사는 29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정부안(7조6천억원)보다 4조6000억원 늘어난 12조2000억원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는 29일 밤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수정안을 의결,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 기준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비 7조 6000억원, 지방비 2조1000억원 등 9조 7000억원으로 잡고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큰 틀에서 합의가 됐다"며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금액을 2000억원 정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 발행 규모는 3조4000억원, 추가 세출 구조조정 규모는 1조2000억원이 됐다.

당초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기존 예산에서 7조6000억원을 절감해 이를 '소득 하위 70%' 대상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국민' 지급에 합의하면서 추경 규모가 11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이후 여야 합의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분인 1조원을 중앙정부에서 세출 구조조정으로 조달하기로 하면서 12조 2000억원의 추경안이 마련됐다.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재원은 3조 6000억원 규모의 국제 발행과 1조원 규모의 추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으나 이날 협의를 통해 세출 구조조정 금액이 2000억원 증가하고 국제 발행금액은 줄었다.

예산결산위는 이날 간사협의회와 전체회의

를 열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 추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국제발행 규모를 더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 예결위 심사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다음달 15일 이전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한 절차를 규정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기간산

업 안정기금 재원 국가보증동의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인터넷전문은행법)과 산업은행법(산은행) 개정안도 동시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다만 인터넷 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대해서는 여당 일부에서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본회의서 처리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 새 국회의장 박병석·김진표 2파전

### 21대 원구성, 부의장직 등 다선 의원 하마평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 하면서 국회의장직을 맡게 돼 당내 후보군 간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다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자천타천 후보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의장 경쟁은 6선의 박병석 의원과 5선의 김진표 의원의 2파전으로 굳어지는 양상이다.

박 의원과 김 의원 모두 다선 중진의 리더십으로 여야를 아우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과 함께 민주당 원내 국회의장 자리에서 누가 낙점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5선인 이상민 의원이 도전 의사를 밝힌 가운데 같은 5선인 변재일·설훈·조정식·안민석 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국회는 1명의 의장과 2명의 부의장으로 구성된 의장단을 둔다. 여야 교섭단체는 원 구성 협상을 통해 의장단 몫을 확정한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2개 교섭단체가 구성되므로, 민주당은 의장직에 더해 부의장직 1



박병석 김진표

석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7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 원 구성 협상 진행 상황을 점검한 뒤 의장·부의장 경선 일정을 확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후보군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의 의석 비율상 11~12석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관례상 이전 국회에서 당 대표나 원내대표,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은 3선 이상의 의원을 상임위원장 후보군으로 상정하고, 선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순으로 몫을 배정한다. /오광록 기자 kroh@

# 민주, 양정숙 '부동산 의혹' 공식 사과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인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양 당선인에 대한 비례대표 후보 검증 과정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양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은 어느 하나 제대로 해명되고 있지 않다"며 "본인 스스로 당선인 신분에서 사퇴하는 것만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송 대변인은 "일단은 (양 당선인이)

시민당 소속이기 때문에 5월 5일 있을 시민당 최종 결정을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러나도 최초의 검증 작업은 민주당에서 했기 때문에 미흡했던 점에 대해 사과드리는 게 마땅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또 이날 더불어민주당 비례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의혹 등에 휩싸인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인 제명을 확정했다.

앞서 윤리위는 양 당선인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정수장학회 출신 모임 임원 의혹 등이 당헌·당규 위반과 당의 품위 훼손 사유에 해당한다며 제명을 결정했다. /오광록 기자 kroh@

# 답 없는 통합당

### 김종인, 임시 비대위원장 거부에 표류 상태 장기화 중진들, 자성·쇄신 없이 당권에만 눈독 '혼란 가중'

4·15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 84석에 그치며 '역대급' 참패를 당한 미래통합당이 자리싸움에 사분오열하는 자중지란을 면치 못하고 있다.

29일로 총선이 끝난 지 2주가 지났지만 참패 원인을 분석하기는커녕 당 재건과 수습에 나설 차기 지도부체제조차 방향을 잃은 상태다.

통합당은 전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열어 김종인 비대위 전환을 시도했지만, 상임전국위가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며 결국 비대위 구성이 수포로 돌아갔다.

상임전국위에서 '8월31일 전당대회' 부칙을 삭제하지 못한 채 시한부 비대위 구성을 의결하자, 김종인 내정자가 이를 거부하며 당의 좌표 상실 표류 상태는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난파선의 선장 자리를 놓고 자리싸움을 벌이는 이번 사태가 결국 총선 참패를 부른 통합당의 '민낯'을 한층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당내

외의 비판이 무엇보다 거세다. 중진과 대권 주자들이 민심의 회초리에 도배를 끼는 쇠신이나 근본적 반성 없이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자강론과 비대위 구성 등을 어지럽게 내세우며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 중 유일한 당선자로 5선에 성공한 조경태 최고위원은 전일 전국위에서 김종인 비대위가 가결되자 정우택 전국위원장과 동료 최고위원 등에게 사대질과 함께 고향을 치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최고위원은 줄곧 비대위가 아닌 8월 31일 전당대회를 주장해 왔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종인 비대위에 반대하는 중진의원이나 대권주자들은 지금 당권에만 관심이 있다"며 "당을 자기들이 장악하기 좋게 '주문제작형'으로 만들기에 제1 내선 카드가 김종인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 불출마했던 김세연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상임전국위 무산 등이 별로 이상하거나 놀랄지 않다. 위기 상황에서 다같이 스스로를 내려놓고 힘을 모아야 하는데 각자의 사리에 매몰되면 서당이 수렁으로 더 빠져드는지에는 관심이 없다"며 "총선 참패가 끝이 아닌 것 같다. 솔직히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할지 답은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혼란은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의 당내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상황과 겹쳐 더욱 증폭되는 모양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를 겪으면서 당이 이렇다 할 중심점을 잃은 채 표류한 것도 혼란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결국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4·15 총선까지 4연패를 당한 통합당의 위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 전망된다. /연합뉴스

# 국민 31% "불출석 의원 징계 강화해야"

### 갤럽 여론조사

국민들은 국회가 '신뢰받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선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의원들에 대해 징계 수위를 높이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본다는 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문희상 국회의장비서실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3~24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신뢰받는 국회, 일하는 국회' 실현 방안으로 응답자의 31.2%가 '회의 불출석 의원 징계 강

화'를 꼽았다.

이어 '폭저예산 근절로 예산심의 투명성 강화'(15.8%), '상시 국회 운영 및 상설소위 설치 의무화'(11.6%), '윤리 특위 상설화 및 권한 강화'(7.2%), '의장의 질서유지권 강화'(6.8%), '법사위 체계·지구 심사제도 폐지'(6.0%) 순이었다.

'21대 국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길 희망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갈등과 분열 해소를 통한 국민통합'(36.5%)이 1위였고 '협치와 민생의 국회'(34.1%), '개혁 추진'(8.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손해보험협회**

**보행자는 또 다른 정지신호입니다**

교통사고의 약 40%가 보행자 교통사고 도로 위에선 보행자가 최우선입니다 자동차든 사람이든 보고, 서고, 움직이는 습관이 도로 위 생명을 지킵니다